

이재현 “온리원 정신, 반드시 해내겠다는 절실함 가져야”

(CJ그룹 회장)

CJ그룹, 창립 70주년

故 손복남 고문 1주기 추모식 가져
그룹차원 70주년 대외행사는 안해
온리원 재건 전략회의 비공개 진행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창립 70주년을 맞아 선대회장의 경영철학을 새기고 위기돌파를 다짐했다.

CJ그룹은 지난 3일 오전 지난해 창립 기념일에 타계한 고 손복남 고문 1주기 추모식을 갖고, 이어 오후에는 이재현 회장 주재로 ‘온리원(ONLYONE) 재건 전략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엄중한 경영 상황을 고려해 CJ그룹 성장에 평생을 기여해온 고인과 선대회장의 경영철학을 되새기며 내실을 다지는 취지다. 그룹 차원의 70주년 대외행사는 별도로 없었다.

11월 5일은 CJ그룹의 모태인 CJ제일제당이 1953년 부산공장에서 우리나라



3일 오전 서울시 중구 필동 CJ인재원에서 열린 고 손복남 고문 1주기 추모식에서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헌화하고 있다. /CJ그룹

최초로 설당을 만들기 시작한 날이다. 이병철 선대회장이 창립기념일로 지정했고, CJ그룹은 창립이래 줄곧 이날을 창립일로 기념하고 있다.

앞서 3일 CJ인재원에서 진행된 고 손복남 고문 추모식에는 이재현 회장을 비롯해 이미경 CJ ENM 부회장, 이재

환 재산홀딩스 회장, 장순인 이선호 CJ 제일제당 식품성장추진실장, 손녀이경 후 CJENM 브랜드전략실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등 일가 친인척과 주요 계열사 CEO 등이 참석했다.

손 고문은 이재현 회장이 평소 “어머님은 선주(船主), 나는 선장(船長)”이

라고 표현할 정도로 CJ그룹의 탄생과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손 고문은 작년 그룹 창립기념일인 11월 5일에 향년 89세로 타계해 그룹 70주년 창립기념일이 곧 1주기 추모식이 됐다.

이 날 CJ그룹은 CJ인재원의 메인 교

육홀을 손복남 홀로 헌정해 ‘겸허(謙虛)’ 등 고인이 계승한 기업이 정신을 전파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CJ인재원은 이재현 회장이 고인과 어린 시절을 보낸 집터(서울시 중구 필동로 26)에 위치해 있다. CJ그룹은 2003년 손 고문이 인재양성을 위해 그룹에 내놓은 공간에 국내 최초 도심형 연수원인 CJ인재원을 개원하고, 그룹의 미래 주역을 양성하고 있다.

같은날 오후에는 이재현 회장 주재로 CJ인재원에서 ‘온리원(ONLYONE) 재건 전략회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CJ주식회사 김흥기 대표이사와 그룹 계열사 대표이사 및 경영진 30여명이 참석해 그룹의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다짐했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그룹의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온리원 정신을 되새기는 책임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반드시 해내겠다는 절실함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은행 돈잔치’ 비판에 금융권 ‘상생보따리’ 푼다

尹대통령, 잇따 은행권 압박에
이자캐시백 등 서민지원 나서
‘정부, 과도한 개입’ 비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을 향해 ‘돈잔치’, ‘종노릇’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정부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진행했던 상생금융 대책을 다시 마련하고 있지만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고금리와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1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개인 사업자 약 30만명을 대상으로 ▲이자 캐시백 ▲서민금융 공급 확대 ▲에너지 생활비·통신비 지원 ▲경영

컨설팅 지원 등을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오는 1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원금·이자 상환을 유예해온 2500여명 고객에게 6개월간 전월 납부한 이자를 매달 돌려주는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실시해 약 40억원의 지원한다.

제조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 2만 1000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플러스 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인 3만 2000여명도 납부한 이자를 돌려받는다. 각각 210억원과 115억원 규모로 지원될 전망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로 신규 대출을 받는 차주 약 6만여 명(300억원)도 이자 캐시백 수혜 대상이다.

우리금융도 소상공인·자영업자·청

년 등 취약계층 대상 상생금융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기존 상품 개선, 기존 대출의 금리 인상 또는 연체 발생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도 역시 타 은행들의 발걸음에 맞춰 이번 주 관련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처럼 은행들의 자발적 고통분담을 유도하는 정부의 상생금융은 올 상반기 이후 두 번째다.

올 초에도 윤 대통령은 은행들의 ‘성 과급 잔치’와 ‘이자장사’를 두고 ‘은행 돈잔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발언으로 인해 전 금융권은 부랴 부랴 상생금융 대책을 선보이면서 ▲금리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원금상

환 지원 ▲채무감면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실제 금융권 집계에 따르면 은행권(9개), 여전업권(7개), 보험업권(2개)이 올 3~8월 내놓은 상생금융 대책 규모는 총 1조 1479억원, 실제 집행 실적은 4700억원 규모에 이른다.

금융당국 주장될 역시 윤 대통령의 압박을 받아 이달 셋째 주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 소상공인, 청년, 사회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은행 때리기 시즌2를 두고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관성 없는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서민들의 손실을 은행으로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실업급여 부당수급 380명, 19.1억 적발

고용부, 중범죄 217명 檢 고발
19.1억 포함 36.2억 반환명령

정부가 5일 실업급여 부당수급자 380명을 적발하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을 검찰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는 해외체류자가 편법 등으로 실업급여 받는 행위와 관련한 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7월 코로나 19 이후 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 지급액에 대한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고용부는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 1000만 원을 적발했다”며 “부정수급액 19억 원에 대해 추징금 포함, 36억 2000만 원 상당의 반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추가조사 등을 의뢰했다.

관련 피의자가 기소되면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고용부는 실업상태 중 취업해 임금을 받거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받고 있음에도, 고용센터에 실업으로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 등을 적발했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지급금 지급 시 확인된 근무 기간은 취업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

점검받은 또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시 사용되는 컴퓨터의 IP주소 분석을 통해 부정수급자를 가려냈다. 이번에 처음 도입한 색출 기법으로, 재취업한 회사 컴퓨터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무역환경 개선, 청정에너지 수출 등 최선”

산업부, 12일까지 IPEF 7차 공식협상
20여개 부처와 함께 정부대표단 구성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의 연내 마지막 공식 협상이 미국에서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12일(현지 시간)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IPEF 7차 공식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상은 지난달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6차 협상 마무리 후 열흘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올해 마지막 공식협상이 될 전망이다.

협상에서 IPEF 참여국들은 필라1(무역), 필라3(청정경제), 필라4(공정경제) 분야에서 연내 성과를 목표로 잔여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갈 예정이다.

필라2(공급망) 협상은 지난 5월 타결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왼쪽 일곱번째)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5월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돼 평상시엔 공급망 부정적 조치는 자제하는 한편 공급망 다변화 투자 확대 등에 협력하게 된다. 공급망 위기 발생 시엔 역내 대체 공급처 파악 및 매칭,

수출절차 간소화 등 참여국 간 위기대응 네트워크가 가동된다.

우리 정부는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20여 개 부처와

함께 정부 대표단을 구성해 협상에 참여한다.

정부는 역내 규범 선진화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안정적 해외 투자·진출 여건 마련을 목표로 협상에 나선다.

노건기 실장은 “IPEF 성과가 도출되면 역내 규제 투명성 제고를 통해 무역환경이 개선되고, 우리 기업들의 청정 에너지 등과 관련한 인태지역 시장 진출 확대와 함께, 조세 투명성 제고 등 공정한 환경이 조성되리라 기대된다”며 “최대 성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추진되는 다자간 경제협약체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4개국이 참여한다. 이들 나라와 우리나라 교역규모는 3891억달러로 우리 총 교역규모의 39.7%를 차지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